민주당, '원구성 담합' 기초의원 초강경 징계 왜?

소속감이 우선… '군기 잡기'

"통제력 느슨…令이 안선다" 당안팎 여론 반영

일부선 형평성 논란 … 광주시당 조치 촉각

민주당이 원(院) 구성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등 타당 의원들과의 담합을 통해 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에 제명, 당원자격 정지 등 초강경 징계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 박광태 광주시장과 유종필 광주시당 위원장의 힘 겨루기 모습으로 진행된 광주시의회 원 구성 파행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기초 의원들에 대해 초강경 징계 카드를 들고 나온 명분은 우선 민주당 소속 기초 의원들이 자리 욕심에 당과 동료 의원들을 저버리고 열린우리당 의원 등과 담합,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을 배신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에 강력한 징계를 통해 중앙당의 규율과 영을 세워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 서구 및 북구의회, 영암군의회의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담합을 통해 의장직 등을 차지한 의원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초강경 조치는 날로 미약해지는 중앙당의 지방 정치권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당선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기초단체장들이 중앙당을 우습게 아는 경우가 있다"며 "민주당 옷을 입고 당선된 의원들은 당에 대한 기본적인 소속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당 중앙당의 강경 기류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는 의장단 후보들간의 경쟁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중앙당의 일방적 결정이나 같은 당 의원들끼리의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원구성 파행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의회 원구성 파행이 가져온 충격파가 예상외로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부 기초의원 등만 징계할 경우 형평성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광주시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광주시의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광주시의회 원구성 파행 사건이 윤리위에 회부된다면 박광태 광주시장 및 유종필 광주시당 위원장 등의 갈등과 반발을 불러 일으켜 파문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배기운 사무총장도 "광주시의회 원구성 파행 문제는 법원의 판결 이전에 광주시의회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중심으로 이번 광주시의회 원구성 파행 사태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행위자를 가려내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 개막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 개막식에서 김우식(오른쪽) 과학기술 부총리를 비롯한 내빈들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9년간 남북사업 예산 7조3000억원"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 청문회 "재해규모 따라 추경편성"

김대중 정부 이후 올해까지 9년 동안(1998~2006년) 투입된 남북사업 예산은 7조3천억원에 달하며, 특히 노무현 정부 4년(2003년~2006년)간 지원액은 3조6천856억원으로 김대중 정부 5년간 지원액(3조5천80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사업예산현황을 공개했다.

장 후보자는 대북 지원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특수성을 갖고 있어 두 측면을 적절히 조화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에서는 피해 규모가 커 별도의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당국으로서는 가급적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재해복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피해규모가 워낙 크게 되면 다른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성을 부여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자는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 여부와 관련 "인위적인 경기부양과 같은 다른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서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후보자의 개인신상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남구 일원동 40평형 아파트 등 10억원 가량의 부동산과 관계된 투기의혹과 주식 내부자거래, 탈세 및 자녀 증여 의혹 등을 제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건 독자세력화 시동

내달 10일 희망연대 발족 '전국조직화'…바닥 다지기

고건 전 국무총리(사진)가 내달 10일 '희망 한국국민연대'(희망연대)라는 단체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독자세력화에 나선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7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이 단체에서 고 전 총리는 경제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을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도실용주의 개혁세력의 연대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하는 희망연대를 고 전 총리가 구상한 대권플랜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고 전 총리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희망연대는 권역별 지부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정당조직과 비슷한 형태를 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역별 지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것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 전 총리가 범 여권의 차기 대권후보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을 감안해 희망연대를 구상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 제도를 도입하고, 고 전 총리가 우리당의 대권예비후보들과 경쟁을 벌이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희망연대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얘기다.

고 전 총리의 한 측근도 "어느 정당의 추대를 받아 대선후보가 되는 상황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며 "고 전 총리가 만약 기존 정당에 들어갈 경우엔 내부경쟁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희망연대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희망연대가 '미래와 경제', '우민회', '고청련' 등 고 전 총리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단체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할 경우 정치적 기반이 두텁지 않다는 약점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당의 한 의원은 "지금까지 기존 정당의 뒷받침 없이 독자세력화에 성공한 대선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정치인이 참여하지 않는 희망연대가 고 전 총리의 독자세력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김성곤 국방위원장

北에 미사일관련공개서한

국회 김성곤 국방위원장(열린우리당)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안보리의 대북결의 등 현안과 관련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19일 공개서한을 보냈다.

김성곤 위원장은 "지난 5일 북측의 미사일 발사 이후 남한에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마저 북에 대한 지원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너무 순진했고 결국 북한에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반응"이라면서 "미사일 발사는 북한 당국의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6자회담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북한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면서 "미사일 발사와 '북의 선군정치에 남한이 덕 본다'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 그동안 북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려던 남한 및 우방국들의 대북 온건파들이 이제 설 곳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19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친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손을 흔들며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

"정치 관심 없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9일 정치권 일각에서 열린우리당의 대선 후보로 영입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날 "정치에 관심이 없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서울대 총장이란 직분과 견줄만한 것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계에 진출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정 총장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1년 후배로 김 의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정치권에서 영입설이 자주 흘러나왔지만 줄곧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발 들여 놓을 생각이 없다"고 말해 왔다.

정 총장은 퇴임 후에는 경제학부 교수로 돌아가 올해 2학기부터 3과목의 강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